

人間教育은 학교에서보다 社會에서 이루어진다

李 相 禧

(서울大 新聞學科)

교육은 학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받고 사회에서도 받는다. 특히 人間教育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받는 쪽이 더 많다. 학교교육은 지식이나 직업교육에 기울어져 있어서 人間교육 쪽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 못지 않게 教育熱이 높다. 우리의 부모들만큼 자식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는 부모도 드물 것이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탓할 수 있으랴마는 그 자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점수따기 경주와 얼마간의 전문지식이다. 全人教育이나 人間性 함양은 되 돌아볼 겨를이 없고 직업인의 양성에 급급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육제도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構造의 不合理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작 직장에 서의 봉급체계와 인사정책 등에 근본적인 문제가 깃들여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2,30년 동안에 얼마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 사회는 더욱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거칠어지고 말았다. 경제발전이 이룩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 사회는 안정되고 사람들은 품위있고 너그러워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2,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사회는 불안하고 혼란에 빠져 있으며,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초조할 대로 초조하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른바 산업화 과정에 따르는 일반적 부작용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가령 우리들은 산업화와 연관해서 두 가지의 假說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산업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경제수준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여유와 안정을 되찾으며, 나아가서 사회 전체도 안정과 도덕성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산업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상대적 빈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사람들은 더욱 거칠어지고, 나아가서 사회는 부도덕과 범법으로 가득찰 것이다”는 것이다. 지난 2,30년 동안에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걸어 왔을까? 분명 우리들은 후자의 길을 걸어 왔다.

이 두 가설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을까? 산업화 과정에 작용하는 어떤 요인이 한 사회의 앞길을

방향지우는 결정적인 요인인가? 다시 말해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어떤 사회의 인간들은 품위 있고 너그러워지며, 어떤 사회의 인간들은 거칠고 험악해지는 것일까? 이 문제는 분명 산업화 과정이 正當하고 合法的이었는데, 아니면 정통성이 없는 정치권력에 의해서 不當하고 不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富의 축적이나 權力의 획득과정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었다면 그 부와 권력을 인정하고 납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칙적으로 얻어진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이 공평하고 정당하며 일관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추후라도 그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나 변칙적으로 획득한 권력을 恣意的으로 일관성도 없이 행사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업이 정통성이 없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 또한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통성이 없는 政治權力과 부당하게 이룩된 財閥들이 사회와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들이 개정·개정되며, 그 법이나 제도가 그들의 필요나 자의에 따라서 운용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이른바 법도 질서도 없는 사회가 되고 도덕이나 규범은 물론 기본적인 양식마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일찍이 자유당 시대부터 正義와 正當성이 무너져 왔다. 이승만 정권은 민족감정에 영합하여 겉으로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안으로는 흉악한 친일세력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그 정권을 유지해 왔다.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세력을 親共분자로 몰아서 소탕함으로써 그들의 정권을 유지해 왔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과 제도를 수시로 손질하면서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자기네 정권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제벌들을 키워왔다. 新군부세력이 만들어낸 이른바 5共은 그 권력행사의 자의성이 더욱 요란한 정권이었다. 언론 통폐합을 한다고 신문사와 방송국을 탕기도 하고 비위에 거슬리면 제벌도 해체했다. 캄패를 교육시킨다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캄패식으로 교육도 했었다. 그러나 캄패식 교육은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더 악랄한 캄패를 만들 따름이다. 거기에는 사유재산도 人權도 없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 신문에는 당분간 중소기업의 세무사찰을 안한다고 크게 보도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에 와서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6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더욱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단한 배려인 동시에 훌륭한 경제정책으로 홍보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경제정책의 밑바닥에는 기업은 당연히 일상적인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봐주고 안 봐주는 것은 권력을 쥔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기업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政治資金으로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살아 남는 동시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 그것이 慣例라는 것이다. 14대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관계 장관이나 검찰,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을 위반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고 당선이 되더라도 법에 의해 단호히 처리한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軍의 부정투표 사건과 안기부 직원의 흑색선전 사건, 민자당이 동원한 학생조직 '한백회' 사건 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 주었는가.

이와 같이 법과 제도가 집권세력의 자의에 의해서 행사되는 사회에는 正義와 道徳성이 살아 남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배우는 것은 부도덕과 극도의 자의성뿐이다. 人間教育은 학교에서보다 社會에서 이루어진다. ▣